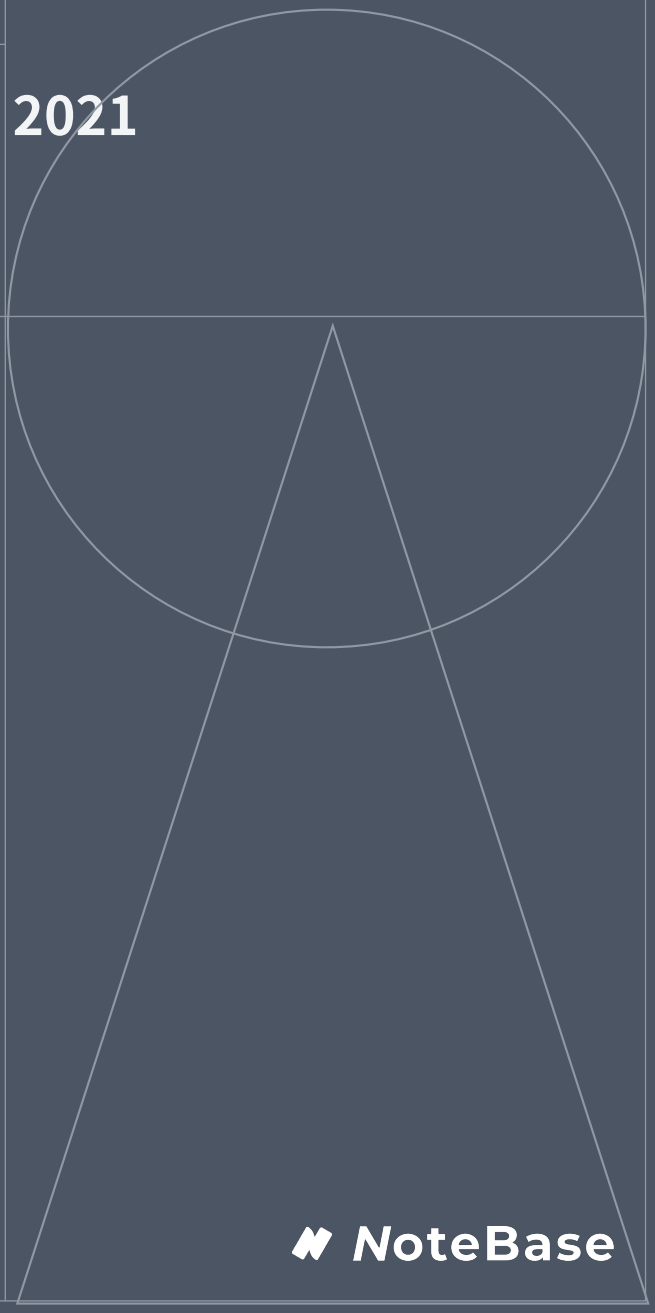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1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1

1. 경제 체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A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한편 B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B는 A에 비해 (가)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① A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 실현을 강조한다.
② B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를 중시한다.
③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④ (가)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에 적합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현대 국가는 대부분 A, B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의사 결정 방식 및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A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므로 시장 경제 체제이고, B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르므로 계획 경제 체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 경제 체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시장 가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다양한 욕구의 반영에 유리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계획 경제 체제: 중앙 정부가 생산과 분배 등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이다. 형평성을 중시하기 쉽지만 효율성과 다양한 욕구의 반영이 떨어질 수 있다.
두 체제의 핵심 차이는 경제적 의사 결정을 시장의 개별 경제 주체가 하는지, 중앙 정부가 하는지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 실현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형평성 실현'이며, 올바르게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실현을 강조한다'이다.
② X —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보다 형평성 실현을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효율성 극대화'이며, 올바르게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 실현을 중시한다'이다.
③ X — A와 B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올바르게는 'A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이다.
④ X —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에는 시장을 통해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이 드러나는 A가 B보다 적합하다. 틀린 부분은 B가 A에 비해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비교이며, 올바르게는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에 적합하다'이다.
⑤ O — 현실의 대부분 국가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과 정부의 계획·개입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서로 바꾼 선지이고, ③은 A와 B의 체제명을 뒤바꾼 선지이다. ④는 '다양한 욕구 반영'이라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계획 경제 체제의 비교 우위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유로운 경제 활동·시장 가격·효율성·다양한 욕구'가 나오면 시장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결정·계획과 통제·형평성'이 나오면 계획 경제 체제로 판단한다. 현대 국가의 현실적 경제 체제는 두 요소가 결합된 혼합 경제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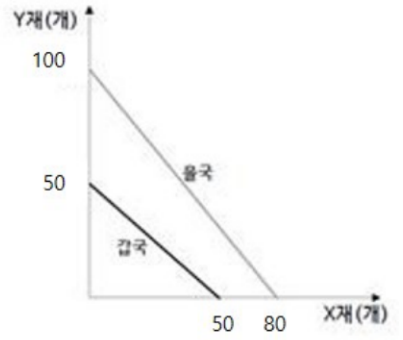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시장 경제는 자유·효율·다양성, 계획 경제는 정부 계획·형평성, 현실 경제는 혼합이다.

NoteBase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하였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갑국은 Y재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에 참여할 것이다.
ㄴ. 을국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ㄷ. 을국은 갑국과 달리 특화 후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ㄹ.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Y재 1개, 을국에서 Y재 5/4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산 가능 곡선의 절편으로 절대 우위를 비교하고, 기울기로 재화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 비교 우위와 특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각 생산 가능 곡선의 X재축·Y재축 절편을 확인한다. 갑국은 X재 50개 또는 Y재 50개, 을국은 X재 80개 또는 Y재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2. 같은 생산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최대량을 비교해 절대 우위를 판단한다.
3.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에서 X재와 Y재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의 비교 우위를 확인한다.

핵심 근거

갑국에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1개이고, Y재 1개의 기회비용도 X재 1개이다. 을국에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frac{5}{4}$개이고,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X재 $\frac{4}{5}$개이다. 따라서 X재는 갑국, Y재는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며, 을국은 두 재화 모두 최대 생산량이 더 커 절대 우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ㄴ과 ㄹ이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만 옳다. 갑국은 Y재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낮은 X재 생산에 특화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갑국은 X재에 특화하며, 을국도 비교 우위가 있는 Y재에 특화한 뒤 교역 조건이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정해지면 교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ㄱ은 틀리고 ㄹ만 옳다. 갑국의 X재 1개 생산 기회비용은 Y재 1개이지만, 갑국의 특화 재화는 Y재가 아니라 X재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을국은 X재와 Y재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면서 Y재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특화 후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⑤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을국은 X재 최대 80개, Y재 최대 100개로 갑국의 50개, 50개보다 모두 많아 두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다. 또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Y재 1개, 을국에서 Y재 $\frac{5}{4}$개이다.

오답 포인트

을국이 두 재화 모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비교 우위까지 두 재화 모두 을국에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절대 우위는 최대 생산량으로 판단하지만,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또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재 1개를 늘릴 때 포기하는 Y재의 양이므로 분자의 순서를 뒤집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축의 절편으로 절대 우위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절편을 X재 절편으로 나눈 값,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X재 절편을 Y재 절편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재화별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그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가지며 그 재화에 특화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 우위는 생산량,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다. 특화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를 따른다.

NoteBase

3. 인플레이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요인에 따라 A와 B로 유형이 구분된다. A는 총수요 증가가 원인이며, B는 총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① A는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된다.
② A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B는 주로 경기 호황기에 나타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정책, 긴축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⑤ A는 B와 달리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총공급 감소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기·물가 효과와 대응 정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소비·투자·정부 지출 등의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단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 GDP가 증가한다.
B는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A는 총수요 증가, B는 총공급 감소가 핵심 구분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에서는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과 실질 GDP가 함께 증가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A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로 총공급이 감소하는 B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B는 주로 경기 호황기에 나타난다'이다. B는 총공급 감소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하므로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B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정책, 긴축통화정책'을 드는 것이다. 긴축 정책은 총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생산 감소와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으므로 B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총공급을 늘리는 공급 측 대책이 필요하다.
⑤ X — 틀린 부분은 'A는 B와 달리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이다. 올바르게는 B가 A와 달리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A와 B 사이에서 뒤바꾼 선지이다. ④는 긴축 정책이 물가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게 하지만, 총수요 감소가 B의 생산 감소를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인이 총수요 증가이면 A로 보고 물가와 실질 GDP가 단기에 함께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원인이 총공급 감소이면 B로 보고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 GDP는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는 수요가 끌어올려 물가와 생산이 함께 상승하고, B는 비용이 밀어 올려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은 감소한다.

NoteBase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환자의 수술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병원의 규정으로 보호자가 부재중인 응급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
> ○ 건물 붕괴로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깔려 있었지만, 해외 동물 반입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로 구조견 관련 외국 구조 지원단의 입국이 지연되었다.

<보 기>

ㄱ. 1차 집단보다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ㄷ.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ㄹ. 정보화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역기능 중 하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두 사례에 공통으로 나타난 관료제의 역기능인 번문욕례를 파악하고, 그것이 주로 나타나는 집단과 사회의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번문욕례는 조직이 본래 목적보다 규칙과 절차의 준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업무 처리가 경직되고 목적 달성이 오히려 방해받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관료제는 규모가 크고 공식적인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며, 공동 사회보다 목적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합한 이익 사회와 관련이 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번문욕례는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공동 사회보다 이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맞다. 번문욕례는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갖춘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며,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상이다.
③ X — ㄴ과 ㄷ 가운데 ㄴ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가 아니라 공동 사회보다 이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번문욕례는 공동 사회보다 이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보화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역기능이 아니라 전통적 관료제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⑤ X — ㄷ은 맞지만 ㄹ이 틀리다.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상은 맞으나, 정보화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역기능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사례에서 규정과 절차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보고 정상적인 업무 분업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규정 준수가 환자 수술과 구조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을 가로막았으므로 핵심은 관료제의 번문욕례이다. 또한 ㄴ은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라고 방향을 뒤집어 제시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식 조직에서 규정·서류·절차 자체가 목적처럼 취급되어 실제 업무 목적이 훼손되는 사례이면 번문욕례로 판단한다. 이 현상은 1차 집단·공동 사회보다 2차 집단·이익 사회 및 관료제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번문욕례는 '목적보다 절차'이며, 2차 집단·이익 사회·관료제의 역기능이다.

NoteBase

5.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가)	(나)	(다)
대상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
특징	사후 처방적 성격	사전 예방적 성격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① (가)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의 비용은 가입자의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다)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는 (다)와 달리 제도 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
⑤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보장 제도인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의 대상·성격·비용 부담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공공 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 원칙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나)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다)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며, 부담 능력이 있는 이용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핵심 대비: 공공 부조는 선별적 금전 급여와 국가 부담, 사회 보험은 보험료와 사전 대비,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과 민간 참여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공공 부조이다. 틀린 표현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의 특징이며, 공공 부조는 가입 방식이 아니라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X — (나)는 사회 보험이다. 틀린 표현은 '가입자의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이다. 사회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며, 개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③ O — (다)는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 서비스는 부담 능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는 (다)와 달리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이다. 민간 기관의 참여가 활발한 것은 주로 (다) 사회 서비스이며, (가)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이다.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조세로 지원하는 (가) 공공 부조가 (나) 사회 보험보다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오답 포인트

표의 '전 국민'만 보고 (나)의 모든 설명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과 사전 대비가 핵심이지만, 보험료가 실제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간 참여는 공공 부조보다 사회 서비스에서 활발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 보험보다 공공 부조에서 더 크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활 곤란자·사후 처방·국가 부담'이면 공공 부조, '전 국민·강제 가입·보험료·사전 대비'이면 사회 보험, '도움이 필요한 국민·비금전적 지원·민간 참여·수익자 부담 가능'이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 부조는 선별·국가 부담,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보험료,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민간 참여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 부조가 더 크다.

NoteBase

6.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을 갖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을 갖는다.

ㄴ. 자연 현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ㄷ.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만 갖는다는 점에서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ㄹ.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고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존재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가치 함축성, 보편성·특수성, 필연성·개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몰가치성·보편성·필연성이 강하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치 함축성·특수성·개연성이 강하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자연 현상은 가치 판단과 무관한 몰가치성을 띠고 시공간을 넘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개입되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② X — ㄷ을 포함한 것이 틀렸다. '두 현상 모두 개연성으로 설명된다'가 아니라, 자연 현상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필연성이 강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일정한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강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ㄹ을 포함한 것이 틀렸다. '두 현상 모두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발생한다'가 아니라,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 법칙에 따라 발생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여 형성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ㄷ의 '모두 개연성'은 '자연 현상은 필연성이 강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이 강하다'로 고쳐야 하며, 가치 함축성을 올바르게 비교한 ㄱ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ㄹ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ㄹ의 '모두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발생'은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여 발생한다'로 고쳐야 하며, ㄱ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연 현상에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현상의 핵심은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이다. ㄹ은 두 현상에 모두 법칙성이 있다는 점을 과장하여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성격을 지운 진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치 개입 여부, 시공간에 따른 차이, 결과의 확실성, 인간 의지의 개입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몰가치성·보편성·필연성은 자연 현상에, 가치 함축성·특수성·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현상은 몰가치·보편·필연,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특수·개연이다.

NoteBase

7.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A에서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A와 B는 ㉠ 차이점을 가지지만, ㉡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① A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이원화되어 있다.
② B에서 내각은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에 'B의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에 'A와 B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행정부 수반의 선출 방식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별하고, 두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수단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를 견제한다.
B 의원 내각제: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정부를 이끄는 정부 형태이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으로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내각을 견제한다.
핵심 대비: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이 엄격하고,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므로 두 지위가 원칙적으로 일원화된다. 틀린 표현은 '이원화되어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되어 있다'이다.
② X — B인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불신임권은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틀린 표현은 '내각은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내각은 의회 해산권으로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내각을 견제한다'이다.
③ X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은 의회 다수파와 내각이 결합하는 의원 내각제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틀린 표현은 'A는 B와 달리'이며, 올바르게는 'B는 A와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쉽다'이다.
④ O — B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대표적 특징이다.
⑤ X —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며, 의원 내각제 내각의 일반적 권한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A와 B의 행정부 수반'이며, 올바르게는 'A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내각 불신임권의 행사 주체를 내각으로 바꾼 함정이다. 의원 내각제의 상호 견제 수단은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으로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③은 신속한 국정 운영이라는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 대통령제,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면 의원 내각제로 판단한다. 이어서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법률안 거부권',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으로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원 내각제는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다.

NoteBase

8.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핵심적 주권 기구인 민회는 전체 시민으로 구성된다. 과세, 도편 추방, 대외 업무 등과 같은 주요 의제들이 민회에서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공적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인 평의회, 50인 위원회 등이 별도로 조직되었다.

①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② 계몽 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③ 여성이나 노예를 시민에서 배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④ 중세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등장한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⑤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회, 500인 평의회, 50인 위원회가 운영된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근대 민주 정치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한 직접 민주 정치이다. 다만 시민의 범위가 성인 남성 자유민으로 제한되어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근대 민주 정치는 계몽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고, 노동자 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을 거치며 보통 선거 제도로 나아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운동'은 산업화 이후 근대 민주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이 성인 남성 자유민에게 제한되었다.
② X — '계몽 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 민주 정치의 사상적 배경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폴리스의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 데 특징이 있다.
③ O —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성인 남성 자유민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여성과 노예는 시민에서 배제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④ X — '중세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등장'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에 관한 설명이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는 중세보다 앞선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등장하였다.
⑤ X —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는 참정권 확대를 거쳐 성립한 근대 민주 정치의 제도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 자유민만 시민으로 인정되어 정치 참여 범위가 제한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②, ④, ⑤는 모두 근대 민주 정치의 형성·발전 과정이나 제도를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처럼 제시한 선지이다. 민회라는 말만 보고 모든 주민이 참여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당시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회와 500인 평의회가 나오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를 떠올리고, 참여 주체가 성인 남성 자유민으로 제한되었는지 확인한다. 계몽사상, 천부 인권, 노동자 참정권 확대, 보통 선거는 근대 민주 정치의 단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고대 아테네는 직접 참여, 그러나 시민은 성인 남성 자유민으로 제한된다.

NoteBase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국회의 주요 기관으로는 의장, ㉢부의장, 각종 위원회, ㉣교섭단체 등이 있다. 또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① ㉠의 임기는 4년 단임제에 해당한다.
② ㉡은 매년 1회 집회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 2인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④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⑤ ㉤의 예로 국정 조사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들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구성, 회기, 주요 기관과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국회의원·의장단의 임기,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입법 권한과 국정 통제 권한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기회 =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한 번 열리는 국회의 회기이다.
교섭단체 =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협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는 의원단체이다.

핵심 구분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 제한은 없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며,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20명 이상을 가진 정당이 구성한다. 법률의 제정·개정은 입법 권한이고, 국정 조사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 통제 권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단임제가 아니므로 연임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4년 단임제'
- 올바른 표현: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다.'

② O
- 헌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고,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X
- 부의장이 2명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 틀린 표현: '그 임기는 4년이다.'
- 올바른 표현: '부의장은 2명이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④ X
-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상이다.
- 틀린 표현: '국회의원 10인 이상'
-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20명 이상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⑤ X
- 국정 조사권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입법 권한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 통제 권한이다.
- 틀린 표현: '입법에 관한 권한의 예'
- 올바른 표현: '국정 조사권과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국정 통제 권한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임기 4년'을 보고 '단임제'까지 맞다고 판단하거나, ③에서 국회의원 임기와 의장단 임기를 같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⑤에서는 국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입법 권한으로 묶지 않고, 법률 제정·개정과 정부 견제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 관련 문항에서는 먼저 '누구의 임기인지'를 확인하고, 숫자를 국회의원 4년·의장단 2년·교섭단체 20명·정기회 100일로 구분한다. 이어서 법률 제정·개정은 입법, 국정 감사·조사와 해임 건의는 국정 통제로 분류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회의원 4년, 의장단 2년, 교섭단체 20명, 정기회 100일이다.

NoteBase

10. 근대 민법의 원리와 그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수정·보완된 민법의 원리>
A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C

① A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② B에 따라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C에 따라「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가해자의 고의가 요구된다.

④ 오늘날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폐기되었다.

⑤ 수정·보완된 민법 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이를 사회적 형평 및 공공복리에 맞게 수정·보완한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A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B가 계약 자유의 원칙, C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고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리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리이다.

핵심 구분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따라서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므로, 제조업자의 고의는 책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개인의 소유 재산에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맞다.
② X —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B에 따라'이다. 올바른 표현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이다. B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정한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③ X — C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므로 고의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해자의 고의가 요구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이다.
④ X —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회성·공공성을 반영하도록 제한되고 수정·보완되었다. 틀린 표현은 '폐기되었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수정·보완되었다'이다.
⑤ X — 수정·보완된 민법 원리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무제한적 확대가 낳은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틀린 표현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대를 들 수 있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B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원리인 계약 공정의 원칙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③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뒤섞었고, ④·⑤는 수정·보완을 폐기 또는 자유주의의 확대로 잘못 표현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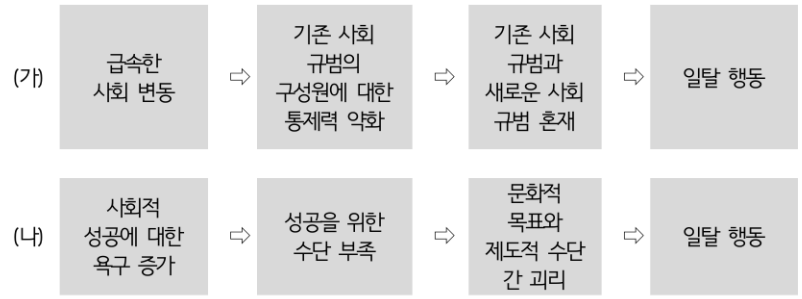
도식의 대응을 먼저 확정한다. 소유권 절대→소유권 공공복리, 계약 자유→계약 공정, 과실 책임→무과실 책임의 순서로 연결한 뒤, 각 선지가 원래 원리와 수정 원리를 뒤바꾸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자유·과실이 공공복리·공정·무과실로 수정·보완된다.

NoteBase

11. 그림은 일탈에 관한 관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②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는다.
③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일탈 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⑤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탈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의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규범의 통제력 약화와 (나)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라는 도식의 핵심 단서를 통해 두 관점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다. 두 관점은 모두 일탈을 개인의 속성보다 사회 구조와 규범 체계의 문제로 설명하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고 보는 차별 교제 이론의 설명이다. (가)와 (나)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사회 규범의 약화 또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일탈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을 중시한다'이다.
② X —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의 관점이다.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 규범과 사회 구조를 원인으로 본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사회 구조와 규범 체계에서 찾는다'이다.
③ X —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인의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낙인 이론과 관련된다. (가)와 (나)는 타인의 평가보다 규범의 통제력 약화와 목표·수단 간 괴리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사회 규범의 약화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이다.
④ O — (가)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규범 혼란이 생기는 기능론적 설명이고, (나)는 사회가 제시한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기능론적 설명이다. 따라서 두 관점 모두 일탈을 야기하는 요인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⑤ X — (가)와 (나)는 개인적 경험보다 사회 구조와 규범 체계에서 일탈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개인적 경험보다는 사회 구조와 규범 체계를 일탈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도식에 일탈 행동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탈 이론의 특징을 공통점으로 고르면 안 된다. ①은 차별 교제 이론, ③은 낙인 이론의 특징이며, 이 도식의 공통 단서는 규범 약화와 목표·수단의 괴리처럼 사회 구조에서 일탈 원인을 찾는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급속한 사회 변동, 규범의 통제력 약화, 규범 혼란이 보이면 아노미적 상황에 주목한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보이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연결한다. 두 설명은 모두 사회 구조와 규범 체계의 문제를 강조하므로 기능론적 관점으로 묶는다.

암기 포인트

규범 약화와 목표·수단 괴리 → 사회 구조가 낳는 일탈 → 기능론이다.

NoteBase

12.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구불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과 편리성이 높 은 반면 이자 수익이 낮다.

②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

③ 주식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④ 펀드는 전문 금융 회사가 운용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으로 국민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요구불 예금, 실적 배당 상품, 주식, 펀드, 사회 보험의 특징을 구별하고 예금자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요구불 예금은 예금자가 원할 때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으로, 유동성과 편리성이 높은 대신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이 낮다.
실적 배당 상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지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과 수익이 확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고,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 운용 회사가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사회 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질병·산업 재해·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요구불 예금은 필요할 때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어 유동성과 편리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낮다.
② X — 틀린 표현은 '대부분의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이다. 실적 배당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행이 판매하더라도 실적 배당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이다.
③ O —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O — 펀드는 전문 운용 회사가 운용하지만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⑤ O — 국민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은행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뜻으로 바꾸어 놓았다. 판매 기관이 은행인지보다 상품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인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투자 상품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 상품의 보호 여부는 판매 장소가 아니라 상품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확정된 원리금을 지급하는 예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 상품을 먼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은행 판매와 예금자 보호는 같은 말이 아니다. 실적 배당 상품의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NoteBase

13. 시장 실패의 사례인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교통 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지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를 누린다.

(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보다 사려는 차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① (가)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비경합성은 나타나지만 비배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다)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난다.
④ (나)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깊다.
⑤ (다)의 문제로 인해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외부 불경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을 사례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 불경제: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다.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들이 교통 체증의 피해를 보지만 운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가)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는 비배제성과 이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보여 준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도 지닌다.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질이 서로 다른 상태이다. 중고차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차량 상태를 더 잘 아는 (다)가 이에 해당하며, 거래 전에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 배제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량을 줄이는 공유 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되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외부 경제'이다. (가)는 운전자의 사고가 제3자에게 교통 체증이라는 불이익을 주고도 그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올바르게는 '(가)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비배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치안 서비스를 누린다는 점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배제성을 직접 보여 준다. 올바르게는 '(나)에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와 (다)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난다'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차량 상태를 더 잘 아는 (다)에서 나타나고, (가)는 외부 불경제이다. 올바르게는 '(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난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나)는 비배제적인 공공재의 혜택을 비용 부담 없이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나)의 사례는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이 깊다'이다.
⑤ O — (다)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의 상태를 더 잘 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품질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거래 전에 질 낮은 중고차가 시장에 더 많이 남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를 무임승차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가)는 제3자에게 끼친 피해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이고, (나)는 공공재의 혜택을 비용 부담 없이 누리는 무임승차이다. 또한 비배제성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한다'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자에게 보상 없는 피해를 주면 외부 불경제,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하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무임승차,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품 정보를 더 많이 가지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판단한다. 정보 격차가 거래 전에 불량한 상품이나 상대방을 선택하게 만들면 역선택이다.

암기 포인트

피해를 떠넘기면 외부 불경제, 공짜 이용은 무임승차, 거래 전 정보 격차는 역선택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갑이 경험한 사회 이동의 유형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대기업 A 회사의 신임 회장 갑은 고졸 출신이다. 갑은 가난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갑은 30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성실하고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회사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보 기>

ㄱ. 갑은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다.
ㄴ. 갑은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였다.
ㄷ. 갑은 개인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ㄹ. 갑은 구조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 사람의 지위 변화가 세대 내 이동·세대 간 이동·개인적 이동·구조적 이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대 내 이동: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이동이다.
세대 간 이동: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 개인적 요인으로 지위가 달라지는 이동이다.
구조적 이동: 산업 구조나 직업 구조의 변화처럼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다수의 지위가 달라지는 이동이다.
갑은 생산직 사원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상승했으므로 세대 내 이동이며, 농민인 부모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으므로 세대 간 이동이다. 또한 성실함과 변화 파악 능력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강조되므로 개인적 이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빠져 있다. 갑의 지위 상승은 개인의 성실함과 능력에서 비롯되었으므로 ㄷ의 개인적 이동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빠져 있다. 농민인 부모 세대와 대기업 회장이 된 자녀 세대의 지위가 다르므로 ㄴ의 세대 간 이동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O — 갑은 자신의 생애 중 생산직 사원에서 회장으로 이동했으므로 ㄱ의 세대 내 이동을 경험했다. 부모인 농민과 지위가 달라졌으므로 ㄴ의 세대 간 이동이며, 개인의 성실함과 능력이 이동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 ㄷ의 개인적 이동에도 해당한다.
④ X — ㄹ의 구조적 이동이 잘못 포함되었고 ㄷ의 개인적 이동이 빠져 있다. 제시문에는 산업 구조나 직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갑 개인의 성실함과 능력이 이동 원인으로 나타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X — ㄹ의 구조적 이동이 잘못 포함되어 있다. 제시문만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다수의 지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한 사례에 여러 사회 이동 유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갑의 현재 지위를 부모와 비교하면 세대 간 이동이고, 갑 자신의 과거 지위와 비교하면 세대 내 이동이다. 다만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구조적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동의 원인이 사회 구조의 변화인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 대상을 먼저 찾는다. 같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세대 내 이동,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면 세대 간 이동이다. 이어 이동 원인이 개인의 노력·능력이면 개인적 이동,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이면 구조적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 생애 비교는 세대 내, 부모와 비교는 세대 간, 원인이 개인이면 개인적, 원인이 사회 구조이면 구조적 이동이다.

NoteBase

15.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물질적 생활 양식이나 가치, 규범, 사회적 관계, 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사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다.

① ㉠에 따르면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로부터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화한다.

② ㉡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지배 집단에 대한 피지배 집단의 불만과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일어난다.

③ ㉢에 따르면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변동이 곧 진화와 발전이다.

④ ㉢은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된 사회 형태라고 전제하고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⑤ ㉣은 사회가 생성과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며, 사회가 퇴보하고 소멸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 변동을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기능론·갈등론과, 변동 방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진화론·순환론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며 균형과 안정을 유지한다고 보고, 사회 변동을 일시적인 불균형을 조정하여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본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형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형태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한다고 본다.

순환론은 사회가 생성·성장·쇠퇴·해체의 과정을 되풀이하므로 퇴보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가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한다는 설명은 기능론이 아니라 진화론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ㄱ에 따르면'이며, 올바르게는 'ㄷ에 따르면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로부터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로 변화한다'이다.
② O —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불평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피지배 집단의 불만과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한다.
③ O — 진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그 변동을 진화와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④ O — 진화론은 서구 사회를 사회 발전의 최종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로 전제하는 서구 중심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⑤ O — 순환론은 사회가 생성·성장·쇠퇴·해체의 주기를 반복한다고 보므로 사회의 퇴보와 소멸 가능성을 인정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단순·미분화에서 복잡·분화로'라는 문구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진화론의 핵심 표현이다. 기능론도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만, 중심 키워드는 발전 단계가 아니라 균형·안정·재균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설명 기준을 구분한다. 사회 구조를 기준으로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면 기능론, 불평등과 갈등을 강조하면 갈등론이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기준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면 진화론, 생성과 쇠퇴의 반복을 강조하면 순환론이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균형, 갈등론은 대립, 진화론은 단순에서 복잡으로, 순환론은 생성에서 쇠퇴의 반복이다.

NoteBase

16. 갑국의 쌀 가격에 따른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쌀 가격 (가마니 당 만원)	수요량(가마니)	공급량(가마니)
80	120	80
90	110	90
100	100	100
110	90	110
120	80	120

① 균형 가격은 100만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00 가마니이다.
② 정부가 쌀의 최고 가격을 90만원으로 결정하면 20 가마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쌀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④ 쌀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⑤ 정부가 쌀 가격을 120만원으로 유지하려면 쌀 40 가마니를 수매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 균형을 찾고, 가격 규제에 따른 초과 수요·초과 공급과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이다. 최고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로 판단한다.

사용할 공식

초과 수요 = 수요량 - 공급량
초과 공급 = 공급량 - 수요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 = ≤ft|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 = 공급량 변화율가격 변화율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가격 100만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100가마니이므로 균형 가격은 100만원, 균형 거래량은 100가마니이다.
2. 최고 가격 90만원에서는 수요량 110가마니, 공급량 90가마니이므로 초과 수요는 110-90=20가마니이다.
3.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때 수요량은 110가마니에서 100가마니로 감소한다. 최초값 기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left|\frac{-10/110}{10/90}\right| = \frac{9}{11} < 1$이므로 비탄력적이다. 중간값 기준으로 계산해도 $\frac{10/105}{10/95} = \frac{19}{21} < 1$이다.
4. 같은 구간에서 공급량은 90가마니에서 100가마니로 증가한다. 공급량과 가격이 모두 90에서 100으로 같은 비율로 변하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5. 정부가 가격을 120만원으로 유지하면 공급량 120가마니에서 수요량 80가마니를 뺀 40가마니가 초과 공급된다.

선지 판단

① O — 가격 100만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100가마니로 일치하므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맞다.
② O — 최고 가격 90만원에서는 수요량 110가마니가 공급량 90가마니보다 20가마니 많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X —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단위 탄력적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비탄력적이다'이다.
④ O — 가격과 공급량이 모두 90에서 100으로 같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 즉 단위 탄력적이다.
⑤ O — 가격 120만원에서 공급량 120가마니와 수요량 80가마니의 차이인 40가마니가 남으므로 정부가 이를 수매해야 해당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요량이 10가마니 줄고 가격이 10만원 올랐다는 절대 변화량만 보고 탄력성을 1로 판단하게 하는 함정이다. 탄력성은 절대 변화량이 아니라 각각의 변화율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점을 찾는다. 가격 규제에서는 해당 가격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계산하고, 탄력성에서는 수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어 1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 아래의 최고 가격은 초과 수요, 균형 위의 가격 유지는 초과 공급이다. 탄력성은 변화량이 아니라 변화율의 비율이다.

NoteBase

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라드부르흐는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3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날 보통 거론되는 것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현존을 보장하고, 정의는 법의 가치로움을 보장한다. 물론 이들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며, '자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ㄴ. ㉡은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ㄷ. ㉢의 적용 사례로 공소시효, 취득시효를 들 수 있다.

ㄹ. ㉠은 법실증주의, ㉢은 자연법론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라드브루흐의 법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뜻과 각 이념에 연결되는 사례·사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평등의 요청으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
합목적성: 법이 특정 시대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법적 안정성: 법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법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공소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그 사례가 된다.
ㄱ X: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다.
ㄴ O: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의 의미이다.
ㄷ O: 공소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실현한다.
ㄹ X: 연결이 반대이다. 정의는 자연법론과, 법적 안정성은 법실증주의와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렸으므로 'ㄱ, ㄴ'은 옳은 설명만을 묶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ㄱ, ㄷ'은 정답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ㄴ은 합목적성의 뜻을, ㄷ은 법적 안정성의 적용 사례를 바르게 설명하므로 'ㄴ, ㄷ'이 옳다.
④ X: ㄴ은 맞지만 ㄹ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연결되는 사상을 거꾸로 제시하였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⑤ X: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렸으므로 'ㄷ, ㄹ'은 정답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ㄱ은 정의의 두 유형을 맞게 제시한 뒤 본질적 내용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또한 ㄹ은 정의와 자연법론, 법적 안정성과 법실증주의의 연결 관계를 서로 뒤바꾸어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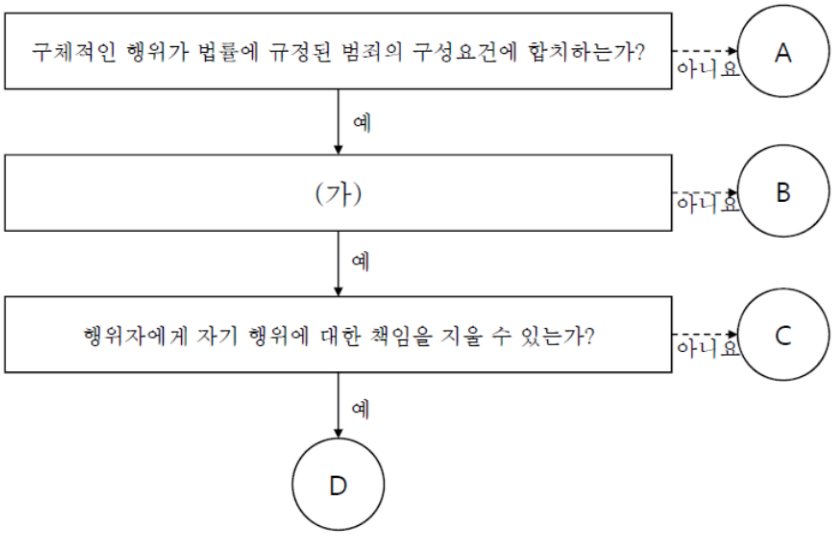
평등·평균적 정의·배분적 정의는 정의, 시대와 국가의 목적은 합목적성, 법질서의 존속·예측 가능성·시효는 법적 안정성으로 분류한다. 이어 정의는 자연법론, 법적 안정성은 법실증주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의는 평등, 합목적성은 목적, 법적 안정성은 확정과 예측 가능성이다. 정의-자연법론, 법적 안정성-법실증주의로 연결된다.

NoteBase

18. 그림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는 A에 해당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로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자구 행위이므로 B에 해당한다.
③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C에 해당한다.
④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D에 해당한다.
⑤ (가)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와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구성요건 해당성 =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의 유형에 들어맞는지를 뜻한다.
위법성 조각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으로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책임 조각 = 행위는 위법하지만 행위자를 비난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도식에서 A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고, (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묻는 단계이다. B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C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D는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며,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 불해당을 뜻하는 A로 바로 빠지지 않는다. 이후 위법성과 책임을 계속 판단한다.
- 틀린 표현: ‘A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판단 단계로 진행한다.

② X
- 사인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적법한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B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이다.
- 틀린 표현: ‘자구 행위이므로’
- 올바른 표현: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이므로 B에 해당한다.

③ O
-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의 위법성보다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부정되므로 C에 해당한다.

④ X
-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 조각을 뜻하는 C에 해당한다. D는 책임까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 틀린 표현: ‘D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책임 조각을 뜻하는 C에 해당한다.

⑤ X
- (가)는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판단의 중심은 행위자보다 행위이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그다음 책임 단계에서 판단한다.
- 틀린 표현: ‘행위보다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
- 올바른 표현: (가)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B라는 결론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구행위'라는 법적 성격이 틀렸다. 또한 ③의 강요된 행위와 ④의 형사미성년자는 모두 책임 단계와 관련되지만, ④를 범죄 성립인 D로 연결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률이 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그 행위가 위법한지,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비난할 책임이 있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은 위법성 단계에, 형사미성년자·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 단계에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순서이며,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사미성년자와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이다.

NoteBase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법치주의를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로 쓴다면 이 세상에 ㉠법치주의가 아닌 나라는 없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정부, 군주 국가 등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보다도 자연법, 정의 등을 포함하는 이성에 기초한 법, 특히 기본적 인권에 기초한 법을 의미한다. 둘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 기관을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기관도 구속한다.

<보 기>

ㄱ.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ㄴ. ㉢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ㄷ. ㉠과 달리 ㉡은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과 달리 ㉠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의 형식과 통치의 합법성만 중시하는 관점과 법의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관점을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미리 정해진 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도 정의, 인간의 존엄, 평등, 기본적 인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입법권도 헌법에 구속되게 하는 제도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은 법에 의한 지배를 통치 수단으로 이해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 더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에는 입법기관도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의 사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은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이 통치의 합법성을 주로 강조하고, ㉡은 법 내용의 정당성까지 강조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ㄷ은 '㉠은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은 합법성뿐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인 실질적 법치주의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등 법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ㄷ은 합법성을 주로 강조하는 주체를 ㉠으로, 내용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주체를 ㉡으로 고쳐야 한다. ㄹ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주체를 ㉡으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바꾸어 읽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도 법에 따른 통치를 요구하므로 합법성과 연결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결정적 특징은 법의 내용이 정의와 기본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당성의 요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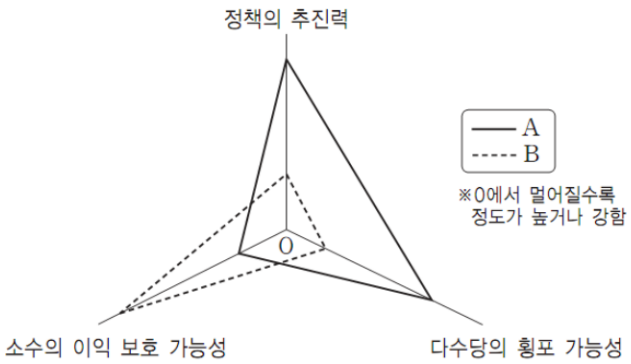
'법의 형식·절차·법에 따른 통치'가 중심이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정의·인간의 존엄·평등·기본권·위헌법률심판'이 나오면 법의 내용과 입법권 통제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을 더한다.

NoteBase

20. 그림에서 A, B는 민주 국가의 서로 다른 정당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ㄴ. A: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곤란하다.
ㄷ. B: 다양한 민의 반영이 곤란하다.
ㄹ. B: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식에서 A는 정책 추진력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크고 소수 이익 보호 가능성이 작은 양당제이며, B는 그 반대 성격을 보이는 다당제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A는 양당제이므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가 다당제보다 좁다. 따라서 'A: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는 'A: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A인 양당제는 정당 선택 범위가 좁고, B인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므로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비교적 쉽다. 따라서 ㄱ의 '넓다'는 '좁다'로, ㄷ의 '곤란하다'는 '용이하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A인 양당제는 두 정당의 대립이 격화되면 정당 간 대립을 중재하기 어렵다. 반면 B인 다당제는 다양한 정당을 통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쉽다. 따라서 'B: 다양한 민의 반영이 곤란하다'는 'B: 다양한 민의 반영이 용이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양당제인 A는 양대 정당의 대립이 심해질 때 중재가 어렵고, 다당제인 B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거나 여러 정당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⑤ X
-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B인 다당제는 다양한 정당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므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쉽다. 따라서 ㄷ의 '다양한 민의 반영이 곤란하다'는 '다양한 민의 반영이 용이하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책 추진력이 강하다는 단서만 보고 A의 장점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A는 양당제이므로 정당 선택의 폭이 좁고 대립 중재가 어려울 수 있으며, B는 다당제이므로 민의 반영에는 유리하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식의 세 축을 함께 본다. 정책 추진력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크고 소수 이익 보호 가능성이 작으면 양당제, 그 반대이면 다당제로 판단한 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선지에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양당제는 강한 추진력·좁은 선택·대립 격화, 다당제는 다양한 민의·넓은 선택·책임 분산으로 정리한다.

NoteBase